

“헬스장 ‘백신패스’ 차별” 불만...정부 “연기없이 즉시 도입”

“마스크 벗고 먹는 식당·술집·카페는 놔두고 왜 헬스장이냐” 반발

‘마스크 쓰기 어려운 상황·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 구조적 요인’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가운데, 헬스장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에도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확정하자 ‘감염 위험도의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시설인 3그룹에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 시설은 2그룹임에도 예외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되자 27일 디씨인사이드 헬스갤러리 등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다. 논란의 요지는 ‘헬스장은 다른 이용시설과 달리 대화를 나누는 등의 감염 확률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 갈 때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매번 PCR검사를 받기 위해 코를 쭉셔야 하냐는 것이다.

백신패스는 기본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접종자 혹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헬스장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헬스장은 진짜 뭐 한다고 고위험시설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접종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는 “헬스장 1년 치 등록했는데 매번 PCR검사 받아야 되냐”고 되물었다. 이에 “미접종자도 마스크 쓰

면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용이 불편에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주 5회 가면 코만 최소 3번 찌르라는 소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같은 주장의 요지는 헬스장이 타 이용시설에 비해 마스크 벗을 일이 적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마스크 벗고 먹는 식당 술집 카페는 놔두고 헬스장이냐”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동조하며 “음식점 카페까지 확대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자의든 타의든 감염 위험성이 낮다고 자평하는 이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만나는데도 친구도 없고 편의점이나 다녀오고 헬스장이나 갔다 오는 게 전 부인 백신인데 굳이 백신 맞을 이유

가 없는데 이거(백신패스) 때문에 맞아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5일 헌법상의 이유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7일 현재 기준, 참여 인원이 3800명을 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백신패스를 연기하지 않고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쟁점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로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활동이 벌어지거나, 마스크

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지속되도록 이뤄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으로 전환 후에는 운영 시간 해제뿐만 아니라 격렬한 유산소운동도 허용되고, 각종 리듬머신 속도 및 음악속도 제한들이 풀리면서 그룹 운동(GX)도 다시 시작한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우선 적용해서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여 나가면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백신패스 도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헬스 관련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신패스를 언급하면 ‘분란을 조장하는 글’이라고 생각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활동이 벌어지거나, 마스크

이슬비 기자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에 과태료 추진 경찰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 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백백’ 방배동 족발집...사장·직원 ‘기소’ 법정 선다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으로 논란 식당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음식점 사장 등이 최근 기소돼 재판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식당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

건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부지검이 식약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

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열흘가량 넘긴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기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넘긴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에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지난 7월 28일 영상 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식당을 적발했다.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유나 기자

목포 경찰, ‘잡초만 무성’ 국도변 농지 부정 매입 투기꾼 18명 송치

실제 영농 의사·능력 안 되는 외지인 다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 발급 받아 투기 목적으로 국도변 땅을 사들인 지주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농 의사가 없는데도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경작) 의지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전남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주변 교각 공사 현장 주

변 농지(37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주소등록지 또는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전남 순천 등으로, 목포 지역 연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해당 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도 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입 당시 3.3㎡(1평)당 3~4만 원에서 거래되던 농지는 수십만 원 상당으로 시세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토지 매각, 공공 수용 등을 통해 부정 수익을 거두진 않았지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